

강통전세 283채 '화곡동 빌라왕' 첫 재판서 혐의부인

빌라왕 측 “고의 아냐…민사 책임만 인정” 무자본 갭투자…전세금 31억 안 돌려줘 피해자 18명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무자본 갭투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강통전세를 놓아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으로 지목된 임대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의로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던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도 빌라왕과의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7일 오전 10시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 강모씨와 사기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해 여러사람을 합치게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며 “과실로 발생한 일로 인해 여러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수형복 차림으로 출석한 강씨도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 A씨 측 변호인도 “강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기망 취지가 없었다”

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업자 B씨 측 변호인 역시 “(A씨와) 부동산을 동업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강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강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2015년 4월께 강씨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싶는데 자금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상담하자, 공인중개사 A씨 등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신축빌라가 많다면 “이런 건물을 매수해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채당 150~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강씨는 이 공인중개사가 알선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해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추가로 신축빌라 다수를 사들인 뒤 건축주로부터 1채당 500~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전체 리베이트 중 강씨는 1채당 100~200만 원을 챙겼고, 공인중개사 A씨와 동업자 B씨는 강씨에게 줄 돈과 등기 비용을 뺀 나머지를 5대 5로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강씨에게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능력 이 없었고,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경 한 피해자에게 주택 소유주인 강씨를 임대사업자로 소개하며 “재산이 많고 현금 동원 능력이 좋아 언제든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피해자 16명에게 임대차보증금 28억6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강씨는 A씨 외에 다른 부동산 계약을 통해 피해자 2명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이들 18명 외에도 상당수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기자**

현대시장 잿더미로 만든 40대 방화범...“상인들께 죄송”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0대)씨는 7일 오후 1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마스크를 쓴 채 내린 A씨는 “왜 시장에 불 질렀습니까”, “방화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 왜 계속 불을 지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시장)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인천지법에서 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7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초 A씨의 방화로 인해 55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확인을 통해 47곳으로 정정했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



상 등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본 A씨는 “술이 웬수”라고 말하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이동 동선과 화재 발생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서선욱기자**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4번의 불을 지질렀으며, 여러 범행이 한 사건으로 병합되면서 총 4차례 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범행은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결국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김기현 울산 땅 투기 의혹’ 울산경찰청에 배당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제기된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 후보가 수사의뢰한 해당 의혹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후보가 수사의뢰한 울산 땅 투기 의혹은 당권 경쟁 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지난달 15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황 후보는 KTX 울산역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변경돼 김 후보가 18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선 최종 확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당시 시장이 결정해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도 ‘권력형 토착 비리’, ‘울산판 이재명’ 등으로 공격에 가담했고,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려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황 후보와 안 후보, 양이원영·황윤하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일 수사의뢰했다. **김재환기자**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제조업체 책임자 송치

자재 입고 작업 중인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광주 지역 제조공장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다케이㈜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다케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B(25씨)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철제 코일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A씨가 숨진 B씨가 일한 공정 전반의 작업환경 안전을 파악,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다케이 대표 1명을 입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임행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